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 FTA협정 및 법령 개정표

1.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4p 4번째줄	WTO(World Trade Organization)규범은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자무역규범’으로 불리는데, WTO 체제에서는 (1)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2)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3) 시장접근보장 (4) 투명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규범은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자무역규범’으로 불리는데, WTO 체제에서는 (1)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2)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3) 시장접근보장(MA : Market Access) (4)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 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구수정
10p 주석	7) RCEP은 2013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어 <u>2018년 10월까지 24차례</u> 에 걸친 협상이 진행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통합 논의로, RCEP이 체결될 경우 약 34억명에 달하는 계약국 인구를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RCEP은 2013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0월까지 28차례 에 걸친 협상이 진행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통합 논의로, RCEP이 체결될 경우 약 34억명에 달하는 계약국 인구를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화
21p 3번째줄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와의 <u>FTA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국가 수로는 52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u> <u>여기에 2018년 2월 당국간 정식서명이 완료된 한-중미 FTA가 향후 국회비준 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발효되면 협정 수는 16개, 국가 수는 57개국으로 확대된다.</u>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말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및 중미와의 FTA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국가 수로는 부분발효 중인 한-중미 FTA 5개국이 모두 발효되면 57개국이 된다. 여기에 EU를 탈퇴한 영국과 한-영국 FTA가 정식 발효되면 협정 수는 17개로 늘어나지만 국가 수는 변함없이 57개국이 될 것이다.	현행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p>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u>한-중-일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에콰도르 SECA,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등 11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EAEU FTA 등 3건에 대해서는 협상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u></p> <p><주석14>한-중미 FTA의 중미 측 계약당사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5개국이며 과테말라는 협정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할 예정이다.</p>	<p>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u>한-중-일, RCEP,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등 10건에 대해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PA, 한-EAEU FTA 등 2건에 대해서는 협상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u></p> <p><주석14> 한-중미 FTA의 계약당사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이며 과테말라는 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할 예정이다. <u>국내법 절차가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u>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으로 발효되고 있다.</p> <p><주석 추가> 한-영국 FTA는 양국이 정식 서명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국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 발효될 예정이다.</p>																																																					
22p 표1	<p style="text-align: center;">\ 한-칠레 FTA 추진 경과 \</p> <table><tr><th>일 시</th><th>내 용</th></tr><tr><td>1998.11.</td><td>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td></tr><tr><td>1998.11.05.</td><td>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td></tr><tr><td>1999.12.14.~17.</td><td>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td></tr><tr><td>2002.10.25.</td><td>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td></tr><tr><td>2003.02.15.</td><td>정식서명(서울)</td></tr><tr><td>2003.07.08.</td><td>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td></tr><tr><td>2004.02.16.</td><td>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2004.04.01.</td><td>한-칠레 FTA 발효</td></tr><tr><td>2014.03.31.</td><td>발효 10주년 경과</td></tr><tr><td>2016.11.08.</td><td>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td></tr><tr><td>2018.11.28.</td><td>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td></tr></table>	일 시	내 용	19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11.05.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	1999.12.14.~17.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02.15.	정식서명(서울)	2003.07.08.	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4.0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04.01.	한-칠레 FTA 발효	2014.03.31.	발효 10주년 경과	2016.11.08.	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	2018.11.28.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	<p style="text-align: center;">\ 한-칠레 FTA 추진 경과 \</p> <table><tr><th>일 시</th><th>내 용</th></tr><tr><td>1998.11.</td><td>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td></tr><tr><td>1998.11.05.</td><td>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td></tr><tr><td>1999.12.14.~17.</td><td>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td></tr><tr><td>2002.10.25.</td><td>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td></tr><tr><td>2003.02.15.</td><td>정식서명(서울)</td></tr><tr><td>2003.07.08.</td><td>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td></tr><tr><td>2004.02.16.</td><td>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2004.04.01.</td><td>한-칠레 FTA 발효</td></tr><tr><td>2014.03.31.</td><td>발효 10주년 경과</td></tr><tr><td>2016.11.08.</td><td>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td></tr><tr><td>2018.11.28.</td><td>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td></tr><tr><td>2019.07.04.</td><td>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개최(산티아고)</td></tr><tr><td>2019.10.04</td><td>한-칠레 FTA 개선 3차 협상 개최(서울)</td></tr></table>	일 시	내 용	19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11.05.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	1999.12.14.~17.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02.15.	정식서명(서울)	2003.07.08.	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4.0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04.01.	한-칠레 FTA 발효	2014.03.31.	발효 10주년 경과	2016.11.08.	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	2018.11.28.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	2019.07.04.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19.10.04	한-칠레 FTA 개선 3차 협상 개최(서울)	현행화
일 시	내 용																																																						
19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11.05.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																																																						
1999.12.14.~17.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02.15.	정식서명(서울)																																																						
2003.07.08.	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4.0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04.01.	한-칠레 FTA 발효																																																						
2014.03.31.	발효 10주년 경과																																																						
2016.11.08.	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																																																						
2018.11.28.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																																																						
일 시	내 용																																																						
19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 결정 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11.05.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추진에 합의																																																						
1999.12.14.~17.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02.15.	정식서명(서울)																																																						
2003.07.08.	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4.0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04.01.	한-칠레 FTA 발효																																																						
2014.03.31.	발효 10주년 경과																																																						
2016.11.08.	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개선협상 개시 선언(페루 리마)																																																						
2018.11.28.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개최(서울)																																																						
2019.07.04.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19.10.04	한-칠레 FTA 개선 3차 협상 개최(서울)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7p 표1	\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		현행화
	일 시	내 용	
	2003.12.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제 검토 합의	
	2004.10.	CEPA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련 합의사항 발표	
	2006.02.07.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08.09.22.~25.	실질적 타결	
	2009.07.02.	한-인도 CEPA 인도 내각 승인	
	2009.08.07.	공식 서명	
	2009.11.06.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7.09.21.~22.	한-인도 CEPA 제3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2018.12.11.~12.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			
일 시	내 용		
2003.12.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제 검토 합의		
2004.10.	CEPA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련 합의사항 발표		
2006.02.07.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08.09.22.~25.	실질적 타결		
2009.07.02.	한-인도 CEPA 인도 내각 승인		
2009.08.07.	공식 서명		
2009.11.06.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7.09.21.~22.	한-인도 CEPA 제3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2018.12.11.~12.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서울)		
2019.06.17.~18.	한-인도 CEPA 제8차 개선협상 개최(뉴델리)		
29p 표2	\ 한-페루 FTA 추진 경과 \		현행화
	일 시	내 용	
	2005.11.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톨레도(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2006.11.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8.0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8.10.07.	한-페루 FTA 공청회 개최	
	2010.08.30.	한-페루 FTA협상 타결	
	2010.11.15.	한-페루 FTA 가서명	
	2011.03.21.	한-페루 FTA 공식 서명	
	2011.08.01.	한-페루 FTA 발효	
	\ 한-페루 FTA 추진 경과 \		
	일 시	내 용	
2005.11.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톨레도(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2006.11.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8.0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8.10.07.	한-페루 FTA 공청회 개최		
2010.08.30.	한-페루 FTA협상 타결		
2010.11.15.	한-페루 FTA 가서명		
2011.03.21.	한-페루 FTA 공식 서명		
2011.08.01.	한-페루 FTA 발효		
2012.11.28	한-페루 FTA 제1차 공동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개최(리마)		
2014.06.02~03	한-페루 FTA 제2차 공동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개최(서울)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2p 표 1	\ 한-터키 FTA 추진 경과 \		현행화
	일 시	내 용	
	2008.01.	터키측이 한국과의 FTA체결 제안	
	2009.05.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2010.03.19.	한-터키 FTA협상 출범 선언	
	2012.03.26.	한-터키 FTA협정 가서명	
	2012.08.01.	한-터키 FTA협정 정식서명	
	2012.11.23.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1.10.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터키 의회 통과	
	2013.05.01.	한-터키 FTA 발효	
	2017.12.05.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앙카라)	
	2018.08.01.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2019.12.13	한-터키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34p 표 1	\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	
일 시		내 용	
2004.11.		한-캐나다 FTA 예비협약의 개조에 합의	
2005.05.0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2005.07.28.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2014.03.11.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선언	
2014.06.12.		한-캐나다 FTA 가서명	
2014.09.23.		한-캐나다 FTA 정식서명	
2014.12.02.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01.01.		한-캐나다 FTA 발효	
2016.06.30.		한-캐나다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오타와)	
2018.03.27		한-캐나다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5p 표1	\ 한-뉴질랜드 FTA 추진 경과 \		\ 한-뉴질랜드 FTA 추진 경과 \
	일 시	내 용	
	2006.12.	정상회담시 한-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합의	
	2008.05.16.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약의 개최 합의	
	2009.01.16.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9.03.03.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개시 합의	
	2014.11.15.	한-뉴질랜드 FTA협상 타결 선언	
	2014.12.22.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2015.03.23.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2015.11.30.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한-뉴질랜드 FTA 발효	
	2017.04.25.	한-뉴질랜드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018.04.27.	한-뉴질랜드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오클랜드)	
	2019.11.07	한-뉴질랜드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36p 표2	\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일 시	내 용	
	2009.10.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2010.06.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2011.11.08.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2012.04.20.	한-베트남 FTA 공청회	
	2012.08.06.	한-베트남 FTA협상 공식 개시 선언	
	2012.09.	한-베트남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2015.03.28.	한-베트남 FTA 가서명	
	2015.05.05.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2015.11.30.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한-베트남 FTA 발효	
	2016.12.07.	한-베트남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016.12.07.	한-베트남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018.02.02.	한-베트남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호치민)	2018.02.02. 2019.10.22	한-베트남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호치민) 한-베트남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38p 표1	\ 한-중국 FTA 추진 경과 \		\ 한-중국 FTA 추진 경과 \		현행화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2004.09.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4.09.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07.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5.07.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6.11.17.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6.11.17.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05.23.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	2010.05.23.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	
	2010.09.28.~2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2010.09.28.~2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2012.02.24.	한-중 FTA 공청회	2012.02.24.	한-중 FTA 공청회	
	2012.03.01.~0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2012.03.01.~0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2012.05.02.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2012.05.02.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2012.0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2012.0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2014.11.10.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2014.11.10.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	
	2015.06.01.	한-중 FTA 정식서명	2015.06.01.	한-중 FTA 정식서명	
	2015.11.30.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1.30.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한-중 FTA 발효	2015.12.20.	한-중 FTA 발효	
	2017.01.13.	한-중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베이징)	2017.01.13.	한-중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베이징)	
			2018.03.23	한-중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38p 표2 주석 20	발급 주체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18.8.20일 이후부터 중국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 필수)	발급 주체	중국 :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 필수)	시행규칙 제8조8항 ('19.8.30. 개정)
	20) 중국 측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8.8.20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관세청)		20) 중국 측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8.8.20일부터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2019.8.30일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다.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40p 표 1	\ 한-중미 FTA 추진 경과 \				\ 한-중미 FTA 추진 경과 \				현행화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2010.10.		공동연구 개시		2010.10.		공동연구 개시		
	2015.06.18.		한-중미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2015.06.18.		한-중미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2015.09.21.~25		한-중미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5.09.21.~25		한-중미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6.11.16.		한-중미 FTA 실질 타결선언		2016.11.16.		한-중미 FTA 실질 타결선언		
	2017.03.10.		한-중미 FTA 가서명		2017.03.10.		한-중미 FTA 가서명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서명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서명		
				2019.10.01		한-중미 FTA 부분 발효 *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발효			
41p 표 하단	협상진행	한·중·일	2019.04. 제15차 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협상진행	한·중·일	2019.11. 제16차 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현행화
		RCEP	2019.02. 제25차 협상 개최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RCEP	2019.11. 15개국 협정문 타결 RCEP 제3차 정상회의 개최 (방콕)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MERCOSUR	2019.04. 제2차 협상 개최	남미 최대시장		MERCOSUR	2020.02. 제5차 협상 개최	남미 최대시장	
		필리핀	2019.06~09. 4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기여		필리핀	2020.01. 제5차 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기여	
		러시아	2019.06~2020.01 3차례 협상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러시아	2019.06~2020.01 3차례 협상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07~09. 3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말레이시아	2019.07~09. 3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아세안 추가자유화	2017.08. 제16차 이행위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아세안 추가자유화	2019.02. 제17차 이행위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인도 업그레이드	2019.06. 제8차례 개정협상 개최	교역확대 및 원산지기준 개선		인도 업그레이드	2019.06. 제8차례 개정협상 개최	교역확대 및 원산지기준 개선	
		칠레 업그레이드	2019.10. 제3차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칠레 업그레이드	2019.10. 제3차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9.11. 6차례 개정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9.11. 6차례 개정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EAEU	2017.09.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협상재개 여건조성	EAEU	2017.09.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PA	2019.09 PA ToR협의개시	중남미 신흥 시장		PA	2019.09 협상세척 협의개시	중남미 신흥 시장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53p 8번째줄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u>15개</u> FTA협정 중 체약상대국의 당사국이 다수인 협정은 EFTA·아세안· <u>EU</u> 와 맺은 FTA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16개 협정 중 체약상대국의 당사국이 다수인 협정은 EFTA·아세안·EU· 중미 와 맺은 FTA이다.	현행화								
56p 표	<div> <div> \ 제3국 송장 정보 협정별 기재유무 \ </div> <table> <tr> <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th> <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th> </tr> <tr> <td>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td> <td>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td> </tr> </table> </div>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	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	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	<div> <div> \ 제3국 송장 정보 협정별 기재유무 \ </div> <table> <tr> <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th> <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th> </tr> <tr> <td>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td> <td>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td> </tr> </table> </div>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	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	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 영국 ·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	한-영국 FTA 반영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										
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	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	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										
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	터키·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 영국 ·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										
56p 13번째줄	여타의 협정들이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협정상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 <u>캐나다</u> 와의 FTA는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여타의 협정들이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협정상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 캐나다·영국과 의 FTA는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화								
56p 19번째줄	다만, 정형화된 서식이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는 EFTA·EU· <u>터키</u> 와의 FTA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정형화된 서식이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는 EFTA·EU·터키· 영국과 의 FTA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화								
59p 7번째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EU·EFTA· <u>터키</u> 와의 FT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EU·EFTA·터키· 영국과 의 FT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62p 3번째줄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 지역무역협정 체제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보다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옴으로써 <u>2018년 12월말 현재 52개국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u> <u>고, 한-중미 FTA는 타결되어 국회동의 등 비준 절차를 거치면</u> <u>발효될 예정으로 있다.</u>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 지역무역협정 체제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보다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옴으로써 2019년 12월말 현재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한편 한-영국 FTA는 타결되었으나 미발효 중으로, 영국측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에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현행화
63p 14번째줄	하지만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는 등 법령체계와 내용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FTA관세특례법」이 2016년 7월 총 9장, 46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의 반영을 위해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는 등 법령체계와 내용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FTA관세특례법」이 2016년 7월 총 9장, 46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문구 수정
72p 20번째줄	①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제2조 (‘20.3.2. 개정)
73p 5번째줄	④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④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고시 제2조 (‘20.3.2. 개정)
73p 12번째줄	⑦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⑦ “원산지소명서”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고시 제2조 (‘20.3.2.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76p 4번째줄	일반적으로 영문과 국문본이 각각 존재하는 FTA협정문의 특성 상 영문본의 내용이 국문본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u>뉴질랜드와의 FTA</u> 에서는 영문본과 국문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수출입자가 편리한 언어본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국제거래가 대부분 영어에 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무상 영문본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기 <u>5개국과의 FTA</u> 를 제외한 다른 협정은 국문본보다 영문본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문과 국문본이 각각 존재하는 FTA협정문의 특성 상 영문본의 내용이 국문본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의 FTA에서는 영문본과 국문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수출입자가 편리한 언어본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국제거래가 대부분 영어에 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무상 영문본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기 6개국과의 FTA 를 제외한 다른 협정은 국문본보다 영문본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화
81p 11번째줄	(생략)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시행령 제2조제7항) <u><추가></u>	(생략)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시행령 제2조제7항)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는 “유럽연합당사자”에서 영국이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제7항, 일부개정)	시행령 제2조 (‘19.10.29. 개정)
83p 23번째줄	16. 한·중미 FTA <u><추가></u>	16. 한·중미 FTA 17. 한·영국 FTA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시행령 제2조 (‘19.10.29. 개정)
86p 2번째줄	동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u>69개</u>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행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88p 주석 34	<p>3. 적용수량 배정</p> <p>시행령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³⁴⁾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p> <hr/> <p>34)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p> <p>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3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p> <p>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p> <p>3. ~ 5. (생 략)</p>	<p>3. 적용수량 배정</p> <p>시행령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³⁴⁾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p> <hr/> <p>34)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p> <p>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p> <p>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p> <p>3. ~ 5. (현행과 같음)</p>	시행규칙 제3조1항 (‘19.8.30.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89p 13번째줄	<p>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5조제1항)</p> <p>중전에는 협정세율과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으면 협정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관세법 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협정세율 적용시는 원산지증명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관세법 세율 적용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2016.7월)</p>	<p>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p> <p>중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2020.1월)</p>	<p>법 제5조1항 (‘19.12.31. 개정)</p>
96p 11번째줄	<p>⑤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p> <p>⑥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p> <p>⑦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p> <p><u><추가></u></p>	<p>⑤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p> <p>⑥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p> <p>⑦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p> <p>⑧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p>	<p>시행령 제30조 (‘19.10.29. 개정)</p>
97p 7번째줄	<p><u><추가></u></p> <p>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또는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제9항)</p>	<p>③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p> <p>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제9항)</p>	<p>시행령 제30조 (‘19.10.29. 개정)</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07p 2번째줄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2항) (중략)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2항) (중략)	시행령 제4조5항 (‘20.2.11. 개정)
23번째줄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2항)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109p 18번째줄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제3항)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제3항)	법 제8조2항 (‘19.12.31. 개정)
110p 12번째줄	그러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4항)	<삭제>	시행령 제4조4항 (‘20.2.11. 개정)
111p 4번째줄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아래(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5항)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아래(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4항)	시행령 제4조4항 (‘20.2.1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제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13p 6번째줄	<p>1. 개 요</p> <p>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추가></u></p> <p>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동일)</p>	<p>1. 개 요</p> <p>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p> <p>또한,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⁴⁷⁾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이는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2020.4.1.일 시행)</p> <p>2.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p> <p>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동일)</p> <p>⁴⁷⁾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2020.2.11.)</p>	<p>법 제9조2항 (‘19.12.31. 개정)</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13p 16번째줄	<p>2. 수리 후 협정관세 보정 또는 경정청구</p> <p>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3항)</p> <p>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4항)</p> <p>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및 제48조(환급가산금)를 준용한다.(법 제9조제5항)</p>	<p>3. 수리 후 협정관세 보정 또는 경정청구</p> <p>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4항)</p> <p>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5항)</p> <p>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및 제48조(환급가산금)를 준용한다.(법 제9조제6항)</p>	<p>법 제8조4항 ~제6항 (‘19.12.31. 개정)</p>
129p 각주	<p>49)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호주 소재 기업은 기관발급 가능),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u>한-중미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u></p> <p>50)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 제외), 한-EU FTA, 한-터키 FTA 및 <u>한-뉴질랜드 FTA(통일서식 사용 가능)</u>에서 채택하고 있다.</p>	<p>49)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호주 소재 기업은 기관발급 가능),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 FTA, 한-영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p> <p>50)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 제외), 한-EU FTA, 한-터키 FTA, 한-뉴질랜드 FTA(통일서식 사용 가능) 및 한-영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p>	<p>현행화</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41p 13번째줄	①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u>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u> ('18.8.20일 이후에는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①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시행규칙 제8조8항 (‘19.8.30. 개정)
142p 6번째줄	<u><추가></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17 한-영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div> <p>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p> <p>①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p> <p>②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p>	시행규칙 제7조 (‘19.10.3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p>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4항)</p> <p>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시행규칙 제7조제5항)</p> <p>관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제20의2호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p>	
184p 8번째줄	④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u>원산지소명서</u> .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 (‘19.8.30. 개정)
184p 10번째줄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 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고시 제25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고,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고시 제25조)	고시 제25조 (‘20.3.2. 개정)
199p 13번째줄	<추가>	파.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시행규칙 제15조 (‘19.10.3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p>제5호⁶⁰⁾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17항)</p> <p>\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시행규칙 별표 15의3 제5호)\</p> <table><tr><th>품목번호</th><th>원산지 인정요건</th><th>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th></tr><tr><td>1604.20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td><td>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td><td>연 간 쿼 터 : 100 M/T</td></tr><tr><td>5408</td><td>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td><td>연 간 쿼 터 : 1,068,320 SME</td></tr></table>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1604.20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연 간 쿼 터 : 100 M/T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연 간 쿼 터 : 1,068,320 SME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1604.20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연 간 쿼 터 : 100 M/T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연 간 쿼 터 : 1,068,320 SME										
		<p>60)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p> <p>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02p 19번째줄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u>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고시 제39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39조제2항).	고시 제39조2항 (‘20.3.2. 개정)
203p 19번째줄	이 제도는 현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식품, 지역 특산물 등 <u>1,146품목</u> 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물김 수매확인서, 마른 김 수매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등 <u>15종</u> 이다.	이 제도는 현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식품, 지역 특산물 등 1,193품목 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물김 수매확인서, 마른 김 수매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등 16종 이다.	고시 (‘19.12.20. 개정)
217p 13번째줄	서류의 보관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u>자료전달매체</u> 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3항)	서류의 보관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3항)	시행령 제10조3항 (‘20.2.1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20p 2번째줄	<p><u>우리나라의 FTA관세특례법에서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45일⁵⁷⁾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u></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⁵⁷⁾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p> <p>①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p> <p>②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p> <p>③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p> <p>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6항)</p>	<p>시행규칙 제21조5항 (‘19.8.30. 개정)</p> <p>시행규칙 제21조6항 (‘19.8.30. 개정)</p>
	<p>⁵⁷⁾ 원산지증명서 보완 기간이 당초 5일 이상 30일 이내였으나, 한-중미 FTA 내용을 반영하여 5일 이상 45일 이내로 변경되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9.02.08 개정, 한-중미 FTA 발효시 시행)</p>	<p>⁵⁷⁾ 원산지증명서 보완 기간이 당초 5일 이상 30일 이내였으나, 한-중미 FTA 내용을 반영하여 5일 이상 45일 이내로 변경되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9.02.08 개정)</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27p 2번째줄	<div data-bbox="262 272 1104 336" data-label="Section-Header"> <h2>2 원산지오류 수정통보에 대한 수입자의 조치</h2> </div> <p>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u>과부족</u>이 있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0조)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해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u>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u>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p> <p>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법 제14조제2항)</p> <p>만약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u>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u>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6조제2항제3호)</p>	<div data-bbox="1131 272 1973 336" data-label="Section-Header"> <h2>2 원산지오류 수정통보에 대한 수입자의 조치</h2> </div> <div data-bbox="1131 395 1368 432" data-label="Section-Header"> <h3>1. 세액이 부족할 때</h3> </div> <p>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아 당해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세액의 부족이 생겼을 때와 세액이 과다할 때로 구분할 수 있다.</p> <p>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u>부족</u>이 있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0조)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해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u>또는 수정신고</u>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p> <p>만약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u>또는 수정신고</u>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6조제2항제3호)</p> <div data-bbox="1131 1257 1368 1294" data-label="Section-Header"> <h3>2. 세액이 과다할 때</h3> </div> <p>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p>	<p>법 제14조 2항~4항 (‘19.12.31. 개정)</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p>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법 제14조제3항),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는 폐지되었다(2020.1.1일 시행).</p> <p>이는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때의 경정청구 의무규정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불이행 과태료도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것이다.</p> <p>3. 세액 정정 등 절차</p> <p>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을 준용한다.(법 제14조제4항)</p>	
231p 8번째줄	<p>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인증시 서면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u>한-EU FTA에서는</u> 인증수출자에게만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된다.</p>	<p>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인증시 서면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한-EU FTA 및 한-영국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에게만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된다.</p>	한-영국 FTA 반영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39p 5번째줄	<div>6 인증서 재발급</div>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7조제13항)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13항)</p>	<div>6 인증서 재발급</div> <p>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13항)</p> <p>종전(2019.8.30. 이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확대하였다.</p>	시행규칙 제17조13항 ('19.8.30. 개정)
256p 3번째줄	원산지조사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조사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문구정비
259p 14번째줄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22조3항 ('19.8.30.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59p 25번째줄	<p>2. 현지조사 방법</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3조제1항)</p>	<p>2. 현지조사 방법</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3조제1항)</p>	<p>시행규칙 제23조1항 (‘19.8.30. 개정)</p>
265p 22번째줄	<p>⑫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p> <p style="text-align: center;"><u><추가></u></p>	<p>⑫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p> <p>⑬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p>	<p>시행규칙 제37조 (‘19.10.31. 개정)</p>
269p 31번째줄	<p>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추가></u></p>	<p>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 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영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p>	<p>시행규칙 제24조 (‘19.10.31. 개정)</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74p 1번째줄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5조4항 (‘20.2.11. 개정)
275p 1번째줄	⑩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u><추가></u>	⑩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⑪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시행령 제13조 (‘19.10.29. 개정)
333p 1번째줄	①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 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1항 (‘20.2.11. 개정)
336p 1번째줄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제4항 및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1항)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제6항 및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1항 (‘19.12.31. 개정)
338p 14번째줄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②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시행령 제46조 (‘20.2.1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39p 1번째줄	<div>3 가산세</div> <p>가산세는 납세의무자자가 세법상 규정된 신고, 납부, 납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p> <p>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감 및 면제를 관세법에 따라 적용해 오다가 FTA관세특례법 전면 개정(2016.7.1.) 시 가산세 징수 및 일정사유에 따른 면제·경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가산세 경감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p>	<div>3 가산세</div> <p>가산세는 납세의무자자가 세법상 규정된 신고, 납부, 납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p> <p>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감 및 면제를 관세법에 따라 적용해 오다가 FTA관세특례법 전면 개정(2016.7.1.) 시 가산세 징수 및 일정사유에 따른 면제·경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가산세 경감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p> <p>최근(2020.1.1.)에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FTA관세특례법의 가산세 규정도 개정되었다.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비슷한 두 제도를 관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p> <p>＼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p> <table><tr><th>추진배경</th><th>주요내용</th></tr><tr><td rowspan="2">납세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td><td><div>총진</div><div>개정</div><div><div><div>□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div><div>○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div><div>○ (납부고지 후 : 가산금)</div><div>-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0.75%(㉡)</div></div><div><div>□ 납부지연가산세(①+ ②)로 통합</div><div>① 지연이자 성격(㉠+ ㉡)은 통합</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div><div>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div><div>- 미납세액 × 3%</div></div></div></td></tr></table>	추진배경	주요내용	납세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div>총진</div> <div>개정</div> <div><div><div>□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div><div>○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div><div>○ (납부고지 후 : 가산금)</div><div>-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0.75%(㉡)</div></div><div><div>□ 납부지연가산세(①+ ②)로 통합</div><div>① 지연이자 성격(㉠+ ㉡)은 통합</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div><div>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div><div>- 미납세액 × 3%</div></div></div>	법 제36조 (‘19.12.31. 개정)
	추진배경	주요내용					
납세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div>총진</div> <div>개정</div> <div><div><div>□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div><div>○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div><div>○ (납부고지 후 : 가산금)</div><div>-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0.75%(㉡)</div></div><div><div>□ 납부지연가산세(①+ ②)로 통합</div><div>① 지연이자 성격(㉠+ ㉡)은 통합</div><div>-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div><div>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div><div>- 미납세액 × 3%</div></div></div>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39p 7번째줄	<p>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8조의 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법 제36조제1항)</p> <p>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p> <p>② 부족세액에 i)에 따른 일수와 ii)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i)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자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p> <p>ii)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style="text-align: center;"><u><추가></u></p>	<p>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법 제36조제1항)</p> <p>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p> <p>②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i)에 따른 일수와 ii)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i)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p> <p>ii)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39p 20번째줄	<p>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며(법 제36조제2항),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가산세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이다.(시행령 제47조제4항)</p> <p>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p> <p>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u>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령 제47조제5항)</u></p>	<p>다만,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36조제2항)</p> <p>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p> <p>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시행령 제47조제3항), 징수하지 아니하는 가산세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이다.(시행령 제47조제4항)</p> <p>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p> <p>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6조제4항)</p>	

페이지	2019년 기본교제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u><그림 추가></u></p>	<div style="background-color: #00008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 세액 납부, 1년 후 경정고지(1,000원), 경정고지 납부기한 이후 1년 되는 날에 체납액 납부할 경우 세액?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fa;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사례개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법정 납부기한 경정고지 ★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기간 → ★ [15일] [1년] [15일] [1년 체납] 납세신고(협정) 경정 납부기한 체납액 납부일</p> </div> <p><납부세액></p> $1,000 + (1,000 \times 10\%) + (1,000 \times 3\%)$ <p>경정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체납 가산세</p> $+ [1,000 \times (\text{법정 납부기한 다음날} \sim \text{납부일, } (365\text{일} \times 2) \times 0.025\%/\text{일})] = 1,312\text{원}$ <p style="text-align: right;">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5%)</p> </div>	
344p 4번째줄	<p>② 원산지증빙서류</p> <p>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u>(시행령 제49조제2항)</u></p>	<p>② 원산지증빙서류</p> <p>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u>(시행령 제49조제2항)</u> 이때 세관장은 지정의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시 제58조제2항)</p>	고시 제58조2항 (‘20.3.2. 개정)
348p 6번째줄	<p><u>협정</u>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법 제44조3항 (‘19.12.31.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51p 6번째줄	③ 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 <u>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u> 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2항 ('19.12.31. 개정)
352p 표	2. 개별기준 <div> <div>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u>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u>를 하지 않은 경우 </div> <div> 법 제46조제2항제3호 </div> <div> 100 </div> <div> 200 </div> <div> 300 </div> <div> 500 </div> </div>	2. 개별기준 <div> <div>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div> <div> 법 제46조제2항제3호 </div> <div> 100 </div> <div> 200 </div> <div> 300 </div> <div> 500 </div> </div>	시행령 별표25 ('20.2.11. 개정)

2. 주요 오류수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346p 1번째줄	FTA관세특례법에서는 협정 및 국내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 상 <u>위무</u>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관세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에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에서는 협정 및 국내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 상 <u>의무</u>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관세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에 규정하고 있다.	오탈자
350p 12번째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u>법 제44조 제2항</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u>법 제46조 제2항</u>)	조문 정정


3. 주요 추가내용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40p 표2 다음	16) 한-중미 FTA(발효예정)	한-영국 FTA반영																		
	17) 한-영국 FTA('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 발효)																			
	(1) 의의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여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 한-영국 FTA 추진 경과 \																			
	<table><tr><th colspan="2">일 시</th><th>내 용</th></tr><tr><td colspan="2">2016.12.</td><td>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td></tr><tr><td colspan="2">2017.02.24.</td><td>한-영국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td></tr><tr><td colspan="2">2019.06.10.</td><td>한-영국 FTA 원칙적 타결선언</td></tr><tr><td colspan="2">2019.08.22</td><td>한-영국 FTA 정식서명(런던)</td></tr><tr><td colspan="2">2019.10.28</td><td>한-영국 FTA 국회 본회의 통과</td></tr></table>	일 시		내 용	2016.12.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2017.02.24.		한-영국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9.06.10.		한-영국 FTA 원칙적 타결선언	2019.08.22		한-영국 FTA 정식서명(런던)	2019.10.28		한-영국 FTA 국회 본회의 통과	
일 시		내 용																		
2016.12.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2017.02.24.		한-영국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9.06.10.		한-영국 FTA 원칙적 타결선언																		
2019.08.22		한-영국 FTA 정식서명(런던)																		
2019.10.28		한-영국 FTA 국회 본회의 통과																		
	(2) 원산지절차																			
	<table><tr><th colspan="2">협 정 국</th><th>영국</th><th>발효일자</th><th>EU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날</th></tr><tr><td rowspan="3">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 colspan="3">자율발급</td></tr><tr><td>발급주체</td><td colspan="3">수출자(다만, 6,000유로 초과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 필수)</td></tr><tr><td>서 식</td><td colspan="3">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td></tr></table>	협 정 국		영국	발효일자	EU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날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자(다만, 6,000유로 초과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 필수)			서 식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협 정 국		영국	발효일자	EU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날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자(다만, 6,000유로 초과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 필수)																		
	서 식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table><tr><td rowspan="5">역외가공</td><td>유효기간</td><td>발급일로부터 1년</td></tr><tr><td>제출면제</td><td>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영국으로 반입 시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td></tr><tr><td>품 목</td><td rowspan="3">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td></tr><tr><td>지 역</td></tr><tr><td>가 공 비</td></tr><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간접검증</td></tr><tr><td>검증주체</td><td>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td></tr><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td></tr></table>			역외가공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제출면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영국으로 반입 시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품 목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	지 역	가 공 비	원산지 검 증	검증방법	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제3국 발행 송장		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	
역외가공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제출면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영국으로 반입 시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품 목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																			
	지 역																				
	가 공 비																				
원산지 검 증	검증방법	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제3국 발행 송장		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																			
63p 표 다음	<p style="text-align: center;">\ FTA 법령체계 \</p> <table><tr><th>발효 FTA협정</th><th>국내법령</th></tr><tr><td>(생략)</td><td>(생략)</td></tr></table> <p>최근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정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FTA 관세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2020.1월)</p> <p style="text-align: center;">\ FTA관세특례법 주요 개정내역(2020.1.1.시행) \</p> <table><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 정비(제36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td></tr></table>			발효 FTA협정	국내법령	(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 정비(제36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별 개정 반영												
발효 FTA협정	국내법령																				
(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 정비(제36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별 개정
반영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98p~104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교재 제3편 목차></p> <p>제3편 협정관세의 적용</p> <p>제1장 협정관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의 2. 협정관세율 3. 상호대응세율 4.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6. 긴급관세조치 7.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8.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편 제3장 2로 이동) 9. 관세상호협의를 신청(제3편 제3장 4로 이동) <p>제2장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의 도입배경 2.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신청 시기 3.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4.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5.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심사 6. 통관절차의 특례(제3편 제3장 1로 이동)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교재 제3편 목차></p> <p>제3편 협정관세의 적용</p> <p>제1장 협정관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의 2. 협정관세율 3. 상호대응세율 4.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6. 긴급관세조치 7.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p>제2장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의 도입배경 2.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신청 시기 3.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4.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5.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심사 <p>제3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관절차의 특례 2.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3. 상호협력(신규추가, 본 개정표 36~38 페이지 참고) 4. 관세상호협의를 신청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101p 18번째줄	<p>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2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시행령 제35조)</p> <p> 한-미 FTA 수리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있을까?</p> <p>① 우리 기업이 중국산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당해 물품 가격 및 수리·가공비에 부과되는 관세를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의하면 계약 상대방에서 수리 개조 후 국내로 재반입 될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개조의 결과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p> <p>② 우리 기업이 미국산 기계를 수리 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중국)에서 계약당사국(미국)으로 반출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재반입된 상품이기에 한-미 FTA에 의한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제2.6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으로 한국에서 계약상대국인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 후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었으니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라도 관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한-미 FTA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p> <p>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p> <p>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p> <p>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p> <p>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p> <p>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p> <p>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p> </div>	내용 추가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101p 19번째줄	<div data-bbox="259 292 1240 339"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3 상호협력 </div> <p>1. 관세당국의 상호협력</p> <p>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는 체약상대국과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관세당국 간 통관 간소화 및 협정관세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한 상호협력 절차를 두고 있다.</p> <p>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③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④ 세관공무원과 통관중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⑥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p>또한,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33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③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④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p>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4항)</p>	한-영국 FTA반영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p> <p>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다음 각 호의 수출입통계(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영 제4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p> <p>①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p> <p>②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p> <p>③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가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p> <p>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4항, 시행규칙 제35조제2항)</p> <p>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p> <p>②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p> <p>상기 시행규칙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35조제3항)</p> <p>①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p> <p>②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p> <p>③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p> <p>④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p>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p> <p>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다음 각 호의 수출입통계(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영 제42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p> <p>①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p> <p>②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p> <p>③ 그 밖에 영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p> <p>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영 제42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35조제4항)</p> <p>①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p> <p>②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p> <p>상기 시행규칙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35조제5항)</p> <p>①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p> <p>②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p> <p>③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p> <p>④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p>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114p 10번째줄	<p>4.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p> <p>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협정관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이를 보완하여 특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p> <p>칠레, 미국 등과의 협정에서는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수입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 등과의 협정에서는 특정기간 또는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렇게 협정마다 달리 신청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를 수입국의 국내법에 수용하여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협정별 사후적용 신청 \</p> <table border="1"> <thead> <tr> <th>협정</th><th>조문</th><th>신청시기</th></tr> </thead> <tbody> <tr> <td>칠레</td><td>제 5.3 조</td><td>·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td></tr> <tr> <td>인도</td><td>제 4.8 조</td><td>·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td></tr> <tr> <td>EU, 터키, 영국</td><td>제 16 조</td><td>· 수입 후 2년 · 수입 당사자의 법령 기간 내</td></tr> <tr> <td>페루</td><td>제 4.5 조</td><td>·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td></tr> <tr> <td>미국</td><td>제 6.19 조</td><td>· 수입일 후 1년 이내</td></tr> <tr> <td>콜롬비아</td><td>제 3.20 조</td><td>·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td></tr> <tr> <td>호주</td><td>제 3.18 조</td><td>·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td></tr> <tr> <td>캐나다</td><td>제 4.2 조</td><td>·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td></tr> <tr> <td>중국</td><td>제3.18조</td><td>· 수입일 후 1년 이내</td></tr> <tr> <td>뉴질랜드</td><td>제3.18조</td><td>·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td></tr> <tr> <td>베트남</td><td>제3.16조</td><td>· 수입일 후 1년 이내</td></tr> <tr> <td>중미</td><td>제3.21조</td><td>· 수입일부터 1년 이내</td></tr> </tbody> </table>	협정	조문	신청시기	칠레	제 5.3 조	·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	인도	제 4.8 조	·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	EU, 터키, 영국	제 16 조	· 수입 후 2년 · 수입 당사자의 법령 기간 내	페루	제 4.5 조	·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	미국	제 6.19 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콜롬비아	제 3.20 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	호주	제 3.18 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	캐나다	제 4.2 조	·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	중국	제3.18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뉴질랜드	제3.18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	베트남	제3.16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중미	제3.21조	· 수입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 내용추가
협정	조문	신청시기																																							
칠레	제 5.3 조	·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																																							
인도	제 4.8 조	·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																																							
EU, 터키, 영국	제 16 조	· 수입 후 2년 · 수입 당사자의 법령 기간 내																																							
페루	제 4.5 조	·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																																							
미국	제 6.19 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콜롬비아	제 3.20 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																																							
호주	제 3.18 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																																							
캐나다	제 4.2 조	·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년 ·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																																							
중국	제3.18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뉴질랜드	제3.18조	·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																																							
베트남	제3.16조	· 수입일 후 1년 이내																																							
중미	제3.21조	· 수입일부터 1년 이내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아세안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미수취 등으로 수입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적용 신청기간, 신청요건을 미리 알아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한-아세안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19년)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th>신청기간</th><th>신청요건</th></tr> </thead> <tbody> <tr> <td>브루나이</td><td>수입 후 1년 이내</td><td>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td></tr> <tr> <td>캄보디아</td><td>소급 기간 없음</td><td>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td></tr> <tr> <td>인도네시아</td><td>소급 기간 없음</td><td>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td></tr> <tr> <td>라오스</td><td>수입 후 1년 이내</td><td>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td></tr> <tr> <td>말레이시아</td><td>수입 후 1년 이내</td><td>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td></tr> <tr> <td>미얀마</td><td>소급 기간 없음</td><td>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td></tr> <tr> <td>필리핀</td><td>수입일 후 6개월 이내</td><td>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td></tr> <tr> <td>싱가포르</td><td>수입 후 1년 이내</td><td>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td></tr> <tr> <td>태국</td><td>수입 후 1년 이내</td><td>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td></tr> <tr> <td>베트남</td><td>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td><td>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td></tr> </tbody> </table> <p>* 자료: 관세청 FTA포털</p> <p style="text-align: center;">\ 협정별 사후적용 신청 규정 \</p> <p>① 한-칠레 FT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제 5.3 조 수입 관련 의무</p> <p>3.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그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지불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div>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② 한-인도 FTA</p> <p>제 4.8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p> <p>③ 한-EU, 한-터키 FTA</p> <p>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p> <p>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p> <p>④ 한-페루 FTA</p> <p>제 4.5 조 특혜관세대우의 수입 이후 신청</p> <p>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p> <p>⑤ 한-미국 FTA</p> <p>제 6.19 조 수입 관련 의무</p> <p>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 data-bbox="257 288 519 320">⑥ 한-콜롬비아 FTA</p> <div data-bbox="280 379 1883 523"> <p data-bbox="280 379 761 408">제 3.20 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 data-bbox="280 419 1883 523">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p> </div> <p data-bbox="257 571 470 603">⑦ 한-호주 FTA</p> <div data-bbox="280 662 1883 805"> <p data-bbox="280 662 763 691">제 3.18 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 data-bbox="280 702 1883 805">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p> </div> <p data-bbox="257 853 497 885">⑧ 한-캐나다 FTA</p> <div data-bbox="280 944 1883 1088"> <p data-bbox="280 944 573 973">제 4.2 조 수입 관련 의무</p> <p data-bbox="280 984 1883 1088">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상품이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로 납부되었던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div> <p data-bbox="257 1136 470 1168">⑨ 한-중국 FTA</p> <div data-bbox="280 1227 1883 1339"> <p data-bbox="280 1227 645 1256">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p> <p data-bbox="280 1267 1883 1339">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div>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 data-bbox="259 288 517 320">⑩ 한-뉴질랜드 FTA</p> <div data-bbox="280 379 1883 528"> <p data-bbox="280 379 613 408">제3.1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 data-bbox="280 419 1883 528">2.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div> <p data-bbox="259 612 495 644">⑪ 한-베트남 FTA</p> <div data-bbox="280 703 1883 852"> <p data-bbox="280 703 598 732">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 data-bbox="280 743 1883 852">4.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div> <p data-bbox="259 936 468 968">⑫ 한-중미 FTA</p> <div data-bbox="280 1027 1883 1294"> <p data-bbox="280 1027 741 1056">제3.21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p> <p data-bbox="280 1067 1883 1176">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 data-bbox="280 1187 1536 1216">가. 그 상품이 수입 당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수입 당사국의 법규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p> <p data-bbox="280 1227 1099 1256">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리고</p> <p data-bbox="280 1267 1050 1294">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p> </div>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p>⑬ 한-영국 FT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p> <p>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p> </div>	
<p>198p 26번째줄</p>	<p>사.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시행규칙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9항)</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p>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10px;"> <p><u>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부속서 2-가)</u></p> <p>○ 부가규정은 한-터키 FTA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HS 번호 5408호에 분류되는 직물(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에만 적용되는 완화된 규정입니다. 직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직조된 직물이거나 날염된 직물이여야 하지만, HS 5408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역외산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직물 또는 수입한 생지를 염색작업(염색에 수반되는 두 가지 공정 포함)한 직물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합니다.</p> <p>○ 다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HS 5408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연간 200메트릭톤(200,000kg)만 FTA 혜택(선착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기재하여야 하고, 역외산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작업한 경우에는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그러므로 역외산 원사 및 생지를 사용한 HS 5408호에 해당하는 직물 중 부가규정에 의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Derogation-Annex II(a) ~”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에 해당합니다.</p> <p>* 자료: 관세청 FTA포털</p> </div> <p>아.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시행규칙 제15조제10항) (이하생략)</p>	<p>한-터키 내용추가</p>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218p 표 내용 추가	<div>영국</div> <p>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한-영국 FTA반영
224p 하단 표 추가	<p>⑮ 한-영국 FTA</p> <div> <p>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div>	한-영국 FTA반영
301p 하단 표 추가	<p>⑰ 한-영국 FTA</p> <div> <p>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div>	한-영국 FTA반영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div> <p>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p> <p>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p> <p>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p> <p>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p> </div>		
306p 표 내용 추가	영국	<div> <p>제6.6조 사전심사</p> <p>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p> </div>	한-영국 FTA반영